



형 법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舊)「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를 구(舊)「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 ㉠ 존속폭행죄
- ㉡ 외국인수에 대한 폭행죄
- ㉢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 업무상 과실치상죄
- ㉥ 외국사절 모욕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형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실행행위가 착수되었으므로 이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제한적 중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4. ②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이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긴급피난을 ‘정 대 정(正對正)’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 ④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모두 가능하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

- ㉠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은 丙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 ㉡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 ㉤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나 책임능력 또는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

- 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②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행위
- ③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넘는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
- ④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자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7.

-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 ㉡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 甲이 乙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乙의 친구인 丙을 그 차에 감금시키자 丙이 그 차의 창문을 부수고 탈출한 경우 丙의 자동차 창문손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①	㉠	(○)	㉡	(X)	㉢	(X)	㉣	(X)	㉤	(○)
②	㉠	(X)	㉡	(○)	㉢	(○)	㉣	(○)	㉤	(○)
③	㉠	(X)	㉡	(○)	㉢	(X)	㉣	(X)	㉤	(X)
④	㉠	(○)	㉡	(X)	㉢	(X)	㉣	(X)	㉤	(X)

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③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착오의 <유형>과 <사례>를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 형>

- A. 법률의 부지
- B. 효력의 착오
- C. 포섭의 착오
- D.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 E.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F. 반전된 사실의 착오

<사 례>

- ㉠ 친구의 개를 허락 없이 죽이더라도 재물손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죽인 경우
- ㉡ 지하철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을 소매치기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팔을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병역법」상 입대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 ㉣ 마네킹을 사람으로 오인하고 상해하기 위해 돌로 친 경우
-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한 경우
- ㉥ 강도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사인(私人)도 그를 추적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라도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 | | | | | | | | | | |
|---|---|---|---|---|---|---|---|---|---|
| ① | A | - | ㉡ | E | - | ㉢ | F | - | ㉣ |
| ② | B | - | ㉣ | C | - | ㉤ | D | - | ㉥ |
| ③ | C | - | ㉦ | E | - | ㉧ | F | - | ㉨ |
| ④ | D | - | ㉩ | E | - | ㉪ | F | - | ㉫ |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업무상비밀누설죄
- ㉡ 영아살해죄
-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위증죄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 업무상동의낙태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광역시의회의 회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 ㉡ 甲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甲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여 자기는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있고 이복동생은 군복무를 필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대하지 않은 경우
- ㉤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 중립명령위반죄
- ㉣ 도주원조죄
- ㉤ 수도불통죄
- ㉥ 인질강요죄
- ㉦ 특수도주죄
- ㉧ 폭발물사용죄
- ㉨ 일반교통방해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3.

-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 ㉡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 ㉣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인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甲은 제33조 단서에 의해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되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 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 ④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4촌간(비동거)일 경우에는 친고죄이다.

공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 ㉠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 ㉡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 ㉢ 이미 흉기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甲은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 ㉤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만 했을 뿐 실행의 착수에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16.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

- ㉠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상대방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것을 자기 사주겠다고 부추긴 경우에 부추긴 사람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못한다.

18.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형법」상 임의적 물수의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받은 뇌물
- ②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흡식기
- ③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된 유가증권
- ④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

-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3.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3.7. 다시 개정되면서 2010.3.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처벌할 수 있다.
- ㉤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무고의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

- ①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②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신고사실이 진실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 ④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

- ㉠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더라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 ㉢ 상습으로 약 4개월 동안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이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 ㉣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

- ①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

- 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 ④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

- ㉠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 ㉡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청소년에게 “성교를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교한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
- ㉣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 된다.
 - ②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술에 취한 甲과 乙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에 떨어져 甲은 가까스로 귀가하고 乙은 머리를 다쳐 앓다가 추운 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甲은 무죄이다.
 - ④ 4년여 동안 동거하기도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온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돌보지 않아 사망한 경우 동거남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25.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장 甲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장인(丈人) A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 乙에게 “어떻게 해서든 네 차에 A를 태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A가 총회장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해라”고 교사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사건 당일 집을 나오는 A를 협박하여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A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다.

26.

- ① 만약 A가 감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달리던 차량을 빠져나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乙이 A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乙은 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② 만약 乙이 A를 자동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A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약 1시간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고 도주하였다면, 乙은 감금죄와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 ③ 감금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에 대해서는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A가 정신병자인 경우에도 乙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한다.
-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소행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형법」 제310조는 적용이 배제된다.
- ㉣ 명예에 관한 죄 중 모욕죄 이외의 것은 반의사불벌죄이다.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7.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로부터 필로폰 투약사범으로 지명수배된 자를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 ②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甲이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친구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28.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9.

- ㉠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 ㉡ 피담보채권의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0.

- ㉠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이외에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실현한 경우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 ㉣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1.

- ㉠ 甲이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 소총 1정이 부족하자 이를 분실한 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소총 1정을 몰래 가져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사람소리가 들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강도범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 ㉣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 강도미수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甲이 A를 살해한 후 A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 버린 경우, 甲에게는 A의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내란의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2.

- ㉠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였다면 내란선동은 성립하는 것이며, 피선동자에게 내란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 ㉡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그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 ㉢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 ①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1인 주주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 하던 중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 ②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 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과 A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1, 2로 구분하여 소유하 면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상호명의신탁관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된 후, 피고인이 분할 후 A 소유인 토지 부분에 피 고인의 공유지분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하여 근저당 권설정 행위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④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를 처분한 경우,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34. ①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 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 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 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를 적용할 수 없다.
- ②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 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 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③ 노조원들이 적법절차 없이 철제 옷장으로 광업 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결 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기수이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명의 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소유의 선박은 과점주주 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타인이 점유 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여 갔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 규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 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방 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5. ③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다.
-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 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 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 ㉠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이상 그 사람 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 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더라도 사문 서위조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다.
-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 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 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 ㉢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공인중개 사 자격증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 한 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 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 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 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사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 정정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 ② 법원에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운전자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②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 ③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나, 주변사정에 따른 거주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하여 그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9.

- ㉠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 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동거인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화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워 버리려 했던 점이 인정될 뿐 동거인 소유의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결정하여 불을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면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공용·공익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뇌물죄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0.

- ㉠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증뢰물전달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유혹에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하고 乙로부터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 ㉣ 제3자 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